



1일 오후 F1 사업비 조달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9개 금융기관 관계자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영조 KAVO 대표이사 등이 영암 현대호텔에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프로젝트 금융 약정 체결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F1 민자 유치 결실... 질주만 남았다

전남도 1,980억원 PF 약정 체결 지원법도 9월 정기국회 통과 확실

전남도가 오는 2010년 F1(포뮬러 원)국제자동차대회 개최에 필요한 4천34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1천900억 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경주장 건설을 비롯한 F1대회 준비작업이 본격도에 들어서게 됐다.

이와 함께 F1대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F1대회 지원법'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F1자동차대회를 통해 전남의 발전을 앞당기려는 전남도의 야심 찬 계획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1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F1대회운영법인 KAVO(주)의 주주사들과 프로젝트금융(PF)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국내 9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천980억원 규모의 PF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PF약정식에는 KAVO(주)의 주주사인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광주은행과 함께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한화투자신탁, 녹십자생명, LIG손해보험, 신한캐피탈 등 국내 9개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했으며 PF자금은 전액 F1경주장 건설과 운영비로 사용된다. 이번 PF 약정은 특히, 민간 자금을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조달해 사업을 추진한 뒤, 나중에 F1경주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PF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어 국채발사 계획에 따른 전남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 F1대회를 유치한 이후 민·관합작 방식의 대회 운영법인 KAVO를 설립해 F1대회 개최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왔으며, 이번 PF성공으로 기존의 자기자본금 600억 원을 포함해 총 2천580

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하게 됐다.

F1 경주장 건설 총사업비 3천400억 원 중 민간자본을 제외한 금액은 정부와 전남도가 각각 880억 원씩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국비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도비는 9월 추경예산에 880억 원 전액을 반영해 놓고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F1 대회 추진 관련 최대 난관이었던 민자부분 재원조달이 마무리됨에 따라 F1 경주장 건설 등 대회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무산된 F1지원법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PF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어 국채발사 계획에 따른 전남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F1지원법은 올 초부터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서로 합의한 사항인데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그동안 운영법인 KAVO를 설립해 F1대회 개최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왔으며, 이번 PF성공으로 기존의 자기자본금 600억 원을 포함해 총 2천580

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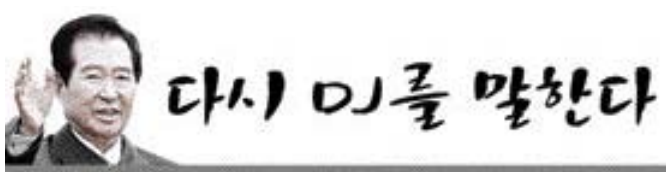
기 마지막 날인 30일 분회의에 전격 상정됐으나 쟁점법안 처리로 회의가 자정까지 지연되면서 국회가 자동 산회, 끝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 어법 강행 처리와 이에 따른 여야 극한대치의 여파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F1대회 개최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PF가 결국 성공한 데 이어 F1대회 지원법도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대회준비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 "F1 대회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 F1 경주장은 토목공정 67%, 건축공정 14%가 진행돼 종합공정률 47%로 예정공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내년 6월 F1 경주장 건설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몇 차례의 시범경기를 거쳐 내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F1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홍철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죽음도 꺾지 못한 굳은 신념 당대 최고 민주·인권 지도자”



4 '민주화 동반자' 한승헌 변호사

“이 땅에서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의지는 어떠한 고난과 좌절, 희유와 협박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민주화의 상징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DJ와 민주화를 위한 행보를 같이 해온 동지이자 DJ 자서전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승헌(75·전 감사원장) 변호사의 회고다.

한 변호사는 “DJ는 정치인으로서 반복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심지어는 '내란 군인'들이 날조한 '5·17 내란음모사건' 재판극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그 어떤 위해도 이 땅에서 독재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굳은 신념과 행동을 꺾지는 못했다. 나라와 겨레의 통일을 향한 위대한 결행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1973년 일본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납치사건을 겪은 뒤 74년 6월에 포다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재판 을 받게 됐어요. 바로 그때 김 전 대통령과 평생 동반자가 될 것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그 후 81년 5월 11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93년 8월 복권될 때까지 무려 8년간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해야 했다.

한 변호사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을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체험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실천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당대 최고의 민주화와 인권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정권을 잡고도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이

71년 첫 인연 평생 민주화 투쟁 동고동락
80년 내란음모사건 함께 체포 고난 겪어



한승헌(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생환 3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전 대통령과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특히 그는 내란음모사건으로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남긴 '죽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소개한 뒤 "이 말은 그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서 선 24명의 동지들에게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을 심어줬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후 군부정권의 회유를 받았고 인간으로서 죽음이 두려웠을 텐데도 끝까지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했다.

한 변호사는 1971년 김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모 출판기념회에서 첫 인사를 했고, 그해 가을 월간 '다리'지 창간 2주년 기념 전국 순회강연 때 연사로서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친해졌다. 이후 유신 시절 민주화 투쟁 당시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야활동을 시작했다.

어갔다고 한 변호사는 평가했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인권위원회 설치, 민주화 인사 보상 및 명예회복 법률 제정, 의문사 조사위 설치,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5·18 광주 국립묘지 조성, 여성부 설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 인권 신장에 열과 성을 다했다.

한 변호사는 “고인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

2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비서관 인사는 10여명이상이 대상으로 알려져 광주·전남 지역 인맥의 기용 여부가 주목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2일 오전 바뀌는 비서관과 명단이 나올 것 같다”면서 “대략 10여 명이 대상이며 내부적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이동되는 부분이 있고, 직제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광주·전남 인사 몇명이나...

오늘 청와대 비서관 10여명 교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후속인사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할 방침”이라며 “전날 발표된 인사내용중 인사기획관 제도 도입이 있는데 검증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공석으로 갈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서관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인맥의 발탁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43명 가운데

지역 인사는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임종룡 경제비서관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서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관료들이 순환되는 데다 새로운 인물이 발탁된다는 점에서 지역 인맥의 중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www.dsu.kr

Dream & Smile 나를 키우는 대학, 동신대학교

2010학년도 동신대학교 수시차 2차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9.9 ~ 9.16 | 지원기간: 10.7 ~ 10.14